

광주 풍암·백운교차로 정체 해소된다

**대광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풍금로~종합유통단지, 서문대로~봉선동 2곳 대상**

광주의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가 놓아지는 등 정부가 전국 6대 광역시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21개 도로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6대 광역시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총 21건(54.7km)의 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간선급행버스(BRT) 및 도시철도·광

여도로 등 광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이 대거 포함됐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광주에는 택지·산단 등 개발로 정체가 심해진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km) 및 서문대로~봉선동(0.8km) 구간에 도로를 놓는다.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km) 도로 신설 사업에는 총 사업비 1249억원(국비 542억원) 이, 서문대로~봉선동(0.8km) 도로 신설 사업에는 총 사업비 752억원(211억원)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 대구·대전 각 5건, 부산 4건,

울산 3건, 인천 2건의 사업이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3조522억원이며 국비는 1조 1758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지원은 9216억원으로, 4차 계획(6903억원) 보다 33.5% 증가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 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시, 내달 20일까지 192대 접수**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192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7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동시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분기자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정차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60만~6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 부담률에 따라 24만~6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3월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문서24로 온라인 접수하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편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062-613-43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결과는 3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

“‘지선-개헌 동시투표’ 국민투표법 설 전후가 시한”

尹 내란혐의 1심 선고 이후 개헌을 요구할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올해 역점을 둘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으며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금 전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 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유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이제는 국민의힘 정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주장해왔다.

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구성)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임기인 우 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추진 의지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산구·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연장 검토

**김영훈 장관, 확대간부회의
고용활성화법 상반기 마련**

고용노동부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 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오는 27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

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역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임금체불 청산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전남광주대통합과 에너지 수도 대도약 최선”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사진)

이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전남도는 5일 신임 행정부지사로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정성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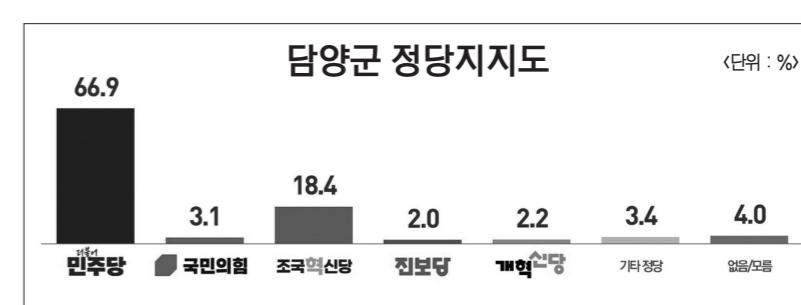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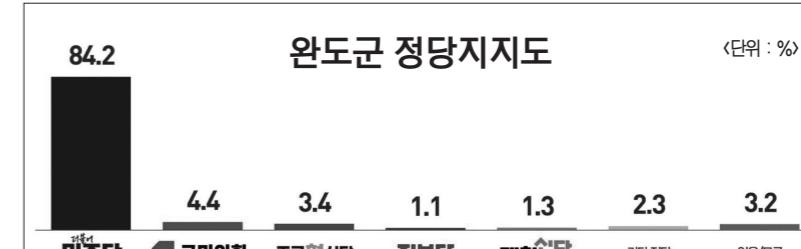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사회적경제 제3부서관 행정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거쳐 전남도 기획조정 실장,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실장,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등 중앙과 지방 간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전남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흥 부군수, 경제통상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점 업무 추진에 중추 역할을 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친화력이 좋은 관리자는 평가를 받았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고향 발전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다”며 “전남·광주의 역사적인 대통합과 AI·에너지 수도 대도약 기틀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남일보·KBC광주방송 ‘6·3지방선거’ 공동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압도’ 당내 공천 경쟁 치열 예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임에 따라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어 정당지지도 2위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에 따라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화순과 강진군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3.5%, 78.4%로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69.4%) 압도 속에 진보당이 6.4%로 국민의힘(6.3%)과 조국혁신당(5.8%)을 극소하게 앞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지지도 70% 넘어
‘2위’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판세는 ‘험로’**

주당 66.9% 압도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9.2%), 국민의힘(9.2%), 개혁신당(3.5%), 진보당(3.0%), 기타 정당(0.6%), 무당층(7.5%) 등이었다.

모든 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한 가운데 40대(72.8%), 60대(80.7%), 70대+(75.6%)에서는 70~80%대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정당지지도도 민주당이 80%대 지지도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4.4%),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1.3%), 진보당(1.1%) 등이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는 이제 명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시 정당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71.4%로 압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9.2%), 국민의힘(6.4%), 개혁신당(3.0%), 진보당(1.7%), 기타 정당(1.9%), 무당층(6.4%) 등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71.6%로 압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9.5%), 국민의힘(6.6%), 개혁신당(2.0%), 진보당(1.8%), 무당층(6.9%) 순이었다.

담양군 정당지지도는 조국혁신당이 18%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혁신당은 30대(21.5%), 50대(24.0%), 60대(22.1%), 1선구구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론조사 어떻게 이뤄졌다?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뷰에 의뢰한 공동 여론조사는 2026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광주 북구·전남 목포

시,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완도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

동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북구 5.7%, 목포 6.3%, 여수시 7.0%, 순천시 6.2%, 담양군 11.3%, 화순군 13.8%, 강진군 15.3%, 완도군 15.6%였다.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국